

# 고1 수능부터 국어·수학 선택과목 도입

## 2021년 11월18일 시행...EBS연계 70%→50%

### 국어 11개·수학 8개가 선택과목에서 출제돼

### 공통과목 점수따라 선택과목 점수 자동보정

현 고 학생들이 2021년 11월18일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수능능력 시험(수능)에서 국어·수학은 선택과목을 도입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치를 수 있게 된다.

2022학년도 수능은 정시모집 비율이 약 10% 늘어나는 만큼 중요도가 높아진다. 또한 수능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도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존 수능체제에서 달라진 부분은 적지 않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가 2만명 규모의 설문조사와 정책 숙의를 거쳐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은 30% 이상으로 늘어났다. 수능의 중요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 셈이다.

2022학년도 수능은 문·이과 구분을 없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국어·수학 영역의 경우 공통과목과 함께 영역별로 선택과목을 1개씩 정하도록 했다는 부분이다. 전체 시험문항 중 공통 문항은 75%, 선택과목 문항은 25% 수준으로 출제된다.

국어의 공통과목은 '독서'와 '문학'이다. 선택과목은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작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총 45개 중 11~12개 문항이 선택과목에서 출제된다.

수학은 기존 가나형 구분이 사라진다. 대신 '수학I'과 '수학II'를 공통과목으로 출제하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과목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수학은 총 30개 중 7~8개 문항이 선택과목에서 출제된다. 유형은 동일하게 5지선다형으로 출제하지만 수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별 문항의 30%(9개)는 단답형 문항을 출제한다.

점수는 일반적으로 총 점수에 따라 백분위와 표준점수, 등급이 결정되는 방식 대신 공통과목 성적과 선택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통과목 점수에 따라 선택과목 점수를 자동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 특정 선택과목에 몰리지 않도록 과목별 점수 격차를 줄이는 방법"

이라며 "지난 2005~2011학년도 수능에서도 공통+선택과목으로 실시하던 수리영역 가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과목을 도입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치를 수 있게 된다."

사회·과학탐구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 ▲문화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등 17개 과목 중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즉 사회탐구 과목과 과학탐구 과목을 1개씩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

다. 직업탐구 영역은 2개 과목에 응시할 경우 제1과목은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선택해야 한다. 다른 한 과목은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1개 과목만 응시할 경우 계열별 선택과목만 택해야 한다.

다만 각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의대나 이공계열 학과는 과학II 과목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과목에 응시하지 않으면 전체 시험이 무효화되고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영역별 총 문항 수와 배점, 시험시간과 순서는 변동사항 없이 동일하다.

상대평가 과목이었던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50점 만점 9등급 절대평가로 바뀐다. 4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1등급이며 2등급(40~44점) 3등급

(35~39점) 등 5점 구간마다 등급이 매겨진다.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한국사와 영어처럼 성적통지표에는 등급만 기재된다.

2011학년도 수능 이후 70%를 유지하던 EBS 연계율은 지난해 대입개편 공문화 이후 확정된 대로 50%로 축소된다. 문항 역시 간접적으로 지분 등을 활용해 출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간 EBS 교재에 실린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방식을 유지해오면서 학교에서 EBS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과도한 지분 암기로 수능에 대비하는 등 학교교육이 파행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된 수능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2020년 5월 중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예시 문항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수능 성적은 2021년 12월 10일 각 응시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뉴스+

# 광주 이슬람 출신 일부 초등생 할랄식품 없어 점심 걸러

##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할랄(HALAL) 식품'이 없어 이슬람 문화권 출신 일부 학생들이 급식을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할랄은 이슬람법에 '허용된 항목'을 뜻하는 말로 식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등 무슬림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율법이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 율법이 허락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식품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2일 학업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H초교 일부 학생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학기 중 급식을 매일 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학생은 확인된 인원만 4명으로, 모두 중동국가 출신 이슬람 가정의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들 결식 아동들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별도 조리에 따른 업무 부담과 할랄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할랄 식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적으로는 '할랄식품을 보장할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학이 몰리거나 한국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안전하고 영양이 있는 먹거리를 급식으로 제공받을 권리(제19조),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제20조)도 포함돼 있다.

조인호 기자



큰우산 아래 작은우산 제9호 태풍 레기마가 만들어낸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린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횡단보도에 설치된 대형 그늘막 아래 시민들이 비를 피하고 있다.

## 목포시의회, '동료 여성시의원 성희롱 의혹' 시의원 제명

동료 여성시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 목포시의원에 대해 목포시의회가 제명을 결정했다.

목포시의회는 12일 오전 '시의원 징계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분회의'를 열고 김모 의원을 제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분회의는 김 의원의 신상발언과 징계를 위한 투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투표는 의원 찬반투표를 거쳐 기명투표로 이뤄졌다. 전체 의원 22명 중 당사자인 김 의

원을 제외한 21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15명이 찬성해 제명이 가결됐다.

의원 제명의 경우 제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제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가처분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의원신분은 유지된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초선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의회 개원 이후 동료 여성시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하고 당적을 박탈한데 이어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표에 앞선 분회의 신상발언에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판결 저런판결

### '출산 전 권고사직 항의' 간호사 법원 "해고 부당하다"

"지나치게 가혹...징계제량권 일탈·남용"

출산 전 권고사직 당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요양원 간호사를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관 사 훈순)는 요양원 설립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간호사로 입사한 B씨가 2018년 2월 임신하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부담스럽다면서 사직을 권고했다.

이에 B씨는 반발하며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올렸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A씨는 복직 명령을 해 구제신청을 취소하게 했다. A씨는 B씨가 복귀한 직후인 2018년 3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며 해고사유가 기재된 통지서를 전달

하고 인터넷 글을 올린 사실로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B씨는 결국 다시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는 2018년 8월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징계가 적당했을 뿐만 아니라 B씨가 복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중앙노동위가 오관했다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B씨를 고용하지 못할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B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구제신청 이유에서 원직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과 지방노동위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봤다.

뉴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각할때, 자발치료 중인 민력어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일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